

“도민 세금이 도지사 경선자금이나?”

민주 사랑화 저지 전북도민대책위, 당 지도부 규탄...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재경선 실시 촉구

더불어민주당 사랑화 저지 전북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 북도지사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 회원 200여 명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심을 역행하는 불공정 경선을 즉각 백지화하고, 180만 전북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경선이 특정 인물과 중앙당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선 관리 과정 전반에서 전북도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도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지역 민심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당원이 위대한 권한을 사유화’하듯 행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선을 좌우하는 것은 명백한 ‘사당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근간을



더불어민주당 사랑화 저지 전북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책위는 “윤리 재감찰 요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며 사실상 정치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원·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대책위는 안호영 의원이 요구한

윤리 재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내부 견제와 자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고,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변화하는 지지를 보내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전북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경선을 진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안호영 의원이 요구한 윤리 재감찰 즉각 실시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 결과 취소 및 전면 재경선 실시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아울러 “허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에 대한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항은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당내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1만호 기자

민생경제 안정·도민 안전 ‘집중’

도, 20~24일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할 도정 주요 사항과 일정을 발표하며 민생 경제 안정과 도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대변인(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예정된 주요 행사와 실·국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고유가 상황에 따른 민생 대책부터 대규모 기업 유치 성과 공유,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까지 폭넓은 도정 현안을 담고 있다. 20일에는 김준호 경제 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비상 경제 대응 TF 회의’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정책 간담회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제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하절기 대비 재해 구호물자 점검 및 사살 예방 집중 홍보 등 복지·안전 분야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보조금 상황 조정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핵심이다.

아울러 RE100 얼라이언스 풍력 분



과회의’를 운영하며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등 전북도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22일에는 농생명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중앙육산 익산공장 준공식’이 열린다. 국내 최고 수준의 도축·가공 설비를 갖춘 시설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첨단산업국에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도 전역에서 전개한다.

23일 정읍에서는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2026년 안전 영농 기원 통수식’이 거행되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린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달 TF’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 밖에도 23일 용담호 수질 개선 활동과 24일 경남 김해시 일일연이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전북도의 문화 관광 스포츠 역량을 활용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역량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24일 도청 공영장에서는 4월 소풍의 날 행사를 열어 공직자들의 혁신 정신을 함양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01만호 기자

전주 서신동 주민들, 현직 시의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 부정수령 의혹 비판

“시민의 신뢰 훼손... 민주 도당 차원에서 즉각 조치하라”

사실 확인 시 윤리 징계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

전주시 서신동 주민들이 현직 시의원의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신동 주민운동본부 소속 이광익 목사를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17일 오전 완산구 흥산로 270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A오 의원의 전복체육회 배구강습 활동비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서신동 주민운동본부 대표 해 발언에 나선 전 YMCA 이사장 이광익 목사는 “시민이 불신하는 시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하며,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해당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전주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여한 서신동 주민운동본부 회원들은 해당 시의원은 해외 연수 기간이나 타 지역 공식 일정, 서울 집회 참석일 등 실제로 전주에서



전주시 서신동 주민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현직 시의원의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비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도당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습이 불가능한 날에도 배구 강습 일지를 작성해 활동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본인이 ‘일지는 써줘야 해서 그렇게 썼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민운동본부는 “전주시 예산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직자가 허위 서류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수령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도덕성 훼손”이라며 “공직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이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 △사실 확인 시 공천 배제 및 윤리 징계 조치 △서신동 주민과 시민을 향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정당의 공천은 단순한 후보 추천이 아니라 시민에게 후보자의 자격을 보증하는 행위”라며 “전북도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사실

상 비호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신동은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주민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에게 자력으로 공천이 주어지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의결할 경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은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신속한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01만호 기자

‘장수·무주 의석 사수... 광역의원 정수 4석 확대’

민주 윤준병 의원, “전북 목소리 반영 최선... 지역 대표성 확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전북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의석을 유지하고, 전북 광역의원 정수를 4석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전북 지역 국회의원의 기본에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구 확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약 22만명 많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9명 적고 전남과는 인구 차이가 약 5만명에 불과하지만 의원 수는 2명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수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특히 인구 중심의 정수 산정 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로 의석 축소가 예상됐던 장수군과 무주군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 두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40석에서 44석으로 4석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에 각각 1석씩 증원되었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 비율 상향에 따라 2석이 추가됐다.

또한 김제시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전북 기초의원 정수도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성과 도민 의견 반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확정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목표했던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후보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민주, ‘분신술 시의원’ 즉각 징계·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유령 배구 수업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당 전주시지역위원회 명의로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시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은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배구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일지를 작성해 감사비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강당을 대관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공무원 출장 및 외부 일정 중에도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나 공

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행정과 의회의 감시 기능이 무너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시의원이 의혹 제기 이후 “프리랜서 관행” 등을 언급하며 해명할 데 대해서는 “정당하게 일하는 체육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

언이자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체육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혈세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 공범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해당 시의원의 즉각 사퇴 및 시민 사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 △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착수 △전주시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01만호 기자

“정책 연대 통해 소멸임실 극복 노력”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한득수 후보 지지 선언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득수 임실군

수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그동안 구상했던 여성·청년·어르신·농업·복지 정책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한득수 후보라고 판단했다”면서 “한 후보와 함께 임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공개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득수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임실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득수 후보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김 후보가 보여줬던 정책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해 왔다”면서 “김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임실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방송 토론회 등에서 한 후보의 임실 발전 정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01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민주 도당, 광역의원 1차 경선 결과 발표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로 후보자 4명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지역 광역의원(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일부 선거구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의견만을 반영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진안군 선거구에서는 전운태 후보가 선출됐으며, 임실군에서는 박정규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됐

다. 순창군 선거구에서는 장승필 후보가, 고창군 제2선거구에서는 김정강 후보가 각각 후보자로 선출됐다.

각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권리당원 온라인 방식의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가 가려졌다. 일부 후보들은 치열한 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권리당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했다”며 “향후 본선 승리를 위해 조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당은 남은 선거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01만호 기자